

①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무엇을 담고 있나

영재교육 수혜자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글 | 최정례 _ 교육과학기술부 영재교육지원과 교육연구사 cjr86@mest.go.kr

영재교육은 그간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인 측면과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을 논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5. 31 교육개혁' 조치에 의하여 당시 교육개혁위원회가 영재교육 강화를 제안한 이후다.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즉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장애의 정도에 맞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갖추어 공교육 차원에서 특수교육을 실시하듯이, 보통교육 체제 하에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법제상으로 1997년 기존 교육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교육기본법 제1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영재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규정을 두었다가,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2002. 3. 1 시행)하고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을 공포·시행(2002. 4. 18)함으로써 법적 기반 위에 영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공교육 체제에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영재교육 비전 제시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등 7개 부처(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특허청)가 공동으로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하 제1차 종합계획)을 2002년 11월 수립, 발표하여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시행하였으며, 향후 5년 간 시행할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 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제1차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던 중앙부처(정보통신부 불참)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2007년 12월 13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국가의 영재교육정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여성부, 특허청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영재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영재교육지원과가 설치되어 국가의 영재교육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영재교육 시행에 대한 지원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잠재력 발현 고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제1차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2003~2007)을 '도입기', 제2차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2008~2012)을 '발전기', 향후 5년 간은 '정착기'로 설정하였다. 또한 2012년까지 영재교육 수혜자를 전체 초·중·고 학생의 1%인 7만여 명까지 확대하여 영재교육기관별로 특성화된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목표치가 주요 국가의 영재교육 대상자 비율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5년 간 영재교육 수혜자가 2배 이상 증가하여 2007년 전체 초·중·고 학생의 0.59%(4만 6천6명)에 이르는 성과가 있었으나,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영재교육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수혜 범위를 늘려가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①영재교육

주요 국가의 영재교육대상자 비율('07)

구분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대만	한국
비율	1~15%	5%	1%	1%	5%	1%	0.59%

기관 특성화 ②영재교육기관 운영 개선 ③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④영재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 ⑤영재교육 지원 체제 정비를 제시하였다.

과학영재학교 2~3개교 추가 지정 예정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영재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영재학교는 과학 분야의 한국과학영재학교(전 부산과학고) 1개교를 운영 중에 있다.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분야별 영재학교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며, 과학 분야는 영재학교 전환을 희망하는 과학고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2~3교를 추가 지정하고, 예술 및 체육 분야는 2012년까지 2교를 신설 또는 기존학교를 전환하는 한편 발명 분야의 영재학교 설립을 검토하되, 영재학교 설립·전환 시 지역균형 발전, 영재교육 영역 등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가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영재학급은 대도시 학교의 경우 학교단위로, 중·소도시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지역공동 영재학급으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의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사이버 영재학급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통합교육이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중앙부처는 중등 과정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또한 집중교육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풀-아웃제를 실시하고 대학, 전문기업 연구기관, 외국 영재기관 등과 연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기관 평가·컨설팅 통해 영재교육기관 운영 개선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개선은 내용적으로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기관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 실시를 통해 이를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영재교육이 교과 선행 학습 또는 상급학교 진학 수단으로 흐르기 쉽다. 그 동안 영재교육이 교과와 연관성이 높은 수학·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인성교육이나 지도력 함양까지 배려한 프로그램을 제공

영재교육기관 운영 계획

구분	'07	'08~'12
영재학교	1교(과학)	5~6교(과학3~4교, 예술·체육 2교)
영재학급 운영기관 수	408	800
영재교육원 운영기관 수	254	295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영재교육 수혜자의 역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기대를 고려하여 전문분야의 재능뿐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덕성을 함께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재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양만 영재교육이고 실제로는 예전의 특기·적성교육 형태로 운영된다면 학생, 학부모로부터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불신으로 영재교육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재교육기관 평가는 운영개선이 목적이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수 기관의 사례를 보급하고 부실 기관의 경우 일정 기간 컨설팅을 하며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기관의 통폐합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영재성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선발해 고등교육 단계까지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야별 선발 시기를 융통성 있게 조절하고, 상대적으로 영재성 발굴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대학에 영재교육 수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제한되었으나, 조기 발굴이 필요한 예술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였고, 기관의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발 과정은 잠재력 측정 중심의 다단계 전형을 거치는데, 특히 교사 추천과 영재성 검사를 강화하였다. 2008학년도 선발 전형부터 교과 관련 선행학습, 사교육 경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발도구를

개발·사용하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영재교육에 대한 일부의 비판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외계층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08년 별도의 선발도구와 학습자료, 운영 모형을 개발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시·도교육청 부설 영재교육기관의 설치를 계속 권장할 계획이다. 이로써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학교에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 전체가 활력을 띠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게 된 사례도 있다.

영재교육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제1차 종합계획은 그 시행 결과 고등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영재교육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단절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교육받는 것을 영재교육으로 인식하여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영재교육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늦어졌다. 그러나 많은 영재교육 수혜자들이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과목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반복이므로 시간낭비에 불과하고 학업에 흥미를 잃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우수한 대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편성, 대학과목선 이수제(UP), PT 제도(시험을 통한 학점인정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해 수학기간을 단축시키고 우수 인재의 조기 공급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 정비

영재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성을 지닌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 재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영재교육 전공과정(석·박사 학위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교사가 영재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추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대와 사대의 교원 양성과정에 영재교육 관련 교과 이수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이 지속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승진 및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에 영재교육 전담교원을 배치·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실시 중인 기본연수와 심화연수, 국외연수 외에도 각 분야별 전문연수와 영재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관리자(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연수도 함께 시행하여 2012년까지 약 3만 명의 연수 이수 교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영재교육의 시행을 위한 지원 체제는 법령과 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들 수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5년 간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시행해본 결과 이제는 자율성과 함께 국가 차원의 일관된 방향 제시와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내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2차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와 배치에 관한 규정,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침, 구체적인 수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권장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 부처가 관련 전문분야의 영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영재교육 관계자가 직접 활용하면서 국가의 영재교육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영재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재성 발달에 가능성 영재교육 도움 안 돼

영재교육 필요성에 공감하고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영재성 계발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2차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에서는 자녀를 영재로 키우기 위해 사교육 기관에서 어렸을 때부터 영재학습을 시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기능적 영재 교육은 학생들의 영재성 발달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건전한 발달에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부적절한 지도로 인해 신동으로 주목받았던 영재들이 사라져 간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재교육이 공교육기관에서 시행되더라도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자녀의 영재성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본래의 영재성이 꽃피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청은 영재교육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2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잠재력 계발이라는 개인적인 측면과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러한 비전의 실현으로 영재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일반적인 공교육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㉓



글쓴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과학교사, 서울사대부설고 과학교사를 지냈다.